통합론 다시 불 지피는 국민의당 제2창당위

"필요하면 통합할 수 있어"
개혁 vs 중도 노선 갈등
지역위원장 물갈이 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 청년위원들과 함께 맥주잔 모양의 청년 희망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29일 '중도통합론'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통합을 목표로 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통합까지)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제2창당위원회가 통합 논의의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창당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논란과 관련, "(바른정당과) 연대와 협력을 잘하며 공통점을 찾다가,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나 지지가 확인되면 거기(통합)까지 갈 수 있다"며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양당의 서로 다른 점을 미리 꺼내놓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력할 과제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오승용 공동위원장 역시 "통합과 관련해 김칫국을 먼저 마시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창당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제 개인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서로의 차이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창당위는 연대·통합론 논의 과정은 물론 당 혁신 과정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노선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개혁적 노선을 당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중도노선이 더 실효적이라는 분들도 있다. 격렬한 노선투쟁이 예고된다"며 "이런 과정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조기에 룰을 정리, 참여하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창당위는 당 혁신 방향의 하나로 "이른바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과 비전이 필요하고,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인재 영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당 혁신 기구인 제2창당위원회의 지역위원장 자진 일괄사퇴 권고와 관련, 일괄사퇴가 아닌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위원장 거취를 포함한 조직정비를 단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일괄사퇴를 강행하지 않는 대신, 조강특위에서 다수 지역위원장 교체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는) 조강특위로 넘기기로 최고위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위원들이 대단히 공정하게 이뤄져 있다. 모든 것을 조강특위에서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219명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자진해서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사퇴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대해 조강특위 심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여야 이주부터 예산·입법 전쟁

SOC 예산 삭감·증세 등 쟁점…한국당 '보이콧' 변수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는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의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할지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한치 양보가 없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쟁점**=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는 11월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 충돌 지점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결산 때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지점이다. 한국당은 줄곧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5000명)은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OC 예산 감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세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법안으로는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 증세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들고 나올때부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한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 불가피**=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잘못될 경우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다 예산·입법 전쟁에서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의 경우 그의 과거 저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부각하며 이념 편향성 지적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하다 뒤늦게서야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반쪽 리그' 바른정당 전대
이번 주 분당 최대 분수령

바른정당이 이번 주에 분당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 보수통합 논의에 속도를 조절해온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우선,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29일 저녁 모임을 하고 향후 통합 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파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이틀 만에 모인 것으로, 이날 모임에는 당내 통합파 의원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출마자는 유승민 의원, 정운천 의원, 박유근 당 재정위원장, 하태경 의원, 정문헌 전 사무총장, 박인숙 의원(기호 순)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모두 자강파로 분류되는 만큼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리그'로 펼쳐지게 됐다. /박지경기자jkpark@

국감 브리핑

박지원 "공기업 채용 비리 엄정 수사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지방까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수사해 공기업 채용 비리도 근절하고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이 업무에 하중이 걸리고 제 경험상 개혁 피로증도 있겠지만 공기업 채용 비리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은 털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선을 다해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과거 수사 및 인사와 관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SAT(미국의 대입수능) 문제 유출 사건 재판 등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의해 공소를 유지해야 함에도 증거를 조작해 공소유지를 했고, 유우성 사건은 무죄가 났고, SAT 사건도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해당 검사들이 승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이 "조사를 해 보겠다. SAT 사건의 경우 진상 파악을 이 자리에서 지시하겠다" 답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박주선 "한국은 중국영토…외국교과서 왜곡 심각"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9일 "한국에 관해 잘못된 내용을 담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서술한 외국 교과서의 지난 5년간 오류 시정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무성의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외교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외국교과서 내 한국관련 오류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을 포함한 101개국 외국교과서에 1356건의 한국관련 오류 시정 요청을 했으나, 이 중 37개국 교과서의 534건만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 교과서 내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슬란드 고등학교 사회학 교과서에는 '한국은 1000명에서 4900명의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노동중'이라고 쓰였다.

역사 왜곡 표현도 적지 않다. 미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중국의 오랜 종속국이던 한국'으로, 예맨 고등학교 세계근현대사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영국식민지'였던 것으로 표현돼 있다. 스위스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중국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 다케시마로 잘못 표기하거나 병기해놓은 교과서도 상당수이지만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73%…3%P 상승

민주당 지지율 45%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73%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10월 넷째 주(24~26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같은 기간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는 '소통 잘함, 국민공감 노력'이 21%로 가장 많았고 '서민 위한 노력, 복지 확대'가 1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는 5%포인트 하락한 11%에 그쳤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45%를 기록하면서 한달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달 들어 48% 수준을 유지했으나 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하며 6%에 그쳐 정당 지지율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삼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017년 하반기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 극대화 및 R&D 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2017년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 : 전라남도(지역경제과)
– 전담기관 :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내역사업 구성

구 분	①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②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③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목적	기업연구조직 확산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성과 확산 및 지역내 · 외 기술교류 촉진	농어촌 지역민의 애로해소 연구개발 지원
지원내용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성과 또는 이전기술의 사업화 연구개발	농어촌 문제 해결 및 농어촌 사회서비스와 기술, 문화 등을 결합한 연구개발
지원규모	5개 과제, 100백만원 내외	7개 과제, 120백만원 내외	1개 과제, 200백만원 내외

□ 사업비의 구성
○ [총사업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수행기관부담금)] + [추가대응자금*]
* 기초지자체(시 · 군) 또는 수행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출자하는 현금사업비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선정시 가점이 부여됨.
○ 내역사업별 사업비 구성

내역사업	총사업비 (A+B+C)	도지원금 (A)	민간부담금(B, 30%)			추가대응자금 (C)
			계	현금	현물	
역량강화 연구개발	100%+α	70%	100%	20%	80%	별도(α)
연구성과 사업화	100%+α	70%	100%	30%	70%	별도(α)
농어촌문제해결형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7. 10. 12(목) ~ 11. 10(금) (30일간)
○ 접수기간 : 2017. 11. 3(금) ~ 11. 10(금) 17: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후 오프라인 서류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시스템(gosims.go.kr)에 접속, 민간보조사업자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방문(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58457]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전남과학기술센터사무실(2층)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문의처
○ 담당부서 :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팀
○ 세부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비 고
내역사업 문의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김학형 선임연구원	061-460-5231 welcon95@jntp.or.kr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김상균 연구원	061-460-5233 sky83@jntp.or.kr	
	농어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김학형 선임연구원	061-460-5231 welcon95@jntp.or.kr	
온라인 사업신청	사업신청	김미경 연구원	061-460-5237 kyung098@jntp.or.kr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www.gosims.go.kr